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의 필요성과 과제

연구진

이중섭_전북연구원 연구위원

POLICY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핑
2017.7.14 vol.18

www.jthink.or.kr

- 01 공동체 복지의 필요성
- 02 공동체 복지사례 분석
- 03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자원 분석
- 04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 구축방안

Contents

POLICY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핑
2017.7.14 vol.18

CONTENTS

- 01 공동체 복지의 필요성
- 02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자원 분석
- 03 공동체 복지사례 분석
- 04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 구축방안

발행인 강현직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의 필요성과 과제

- 전라북도는 높은 복지수요로 인해 복지재정 지출요인이 많은 지역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복지재정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라북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복지에 대한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치매관리제와 공공형 일자리 확대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 등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복지의 확대로 인한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투입에 기반한 국가중심의 복지는 최소한의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저소득 빈곤가구나 취약가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그 이상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세원의 창출이나 국가재정지원의 증가 등 세수기반의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공공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간의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상적인 복지정책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시장과 공동체 즉 민간이 공히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분담하는 체계이다. 전북과 같이 높은 복지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세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연대감이 잔존해 있는 문화적 속성이 강고한 경우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민간 그리고 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복지의 구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복지의 기준선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도 재정중심의 국가복지와 조응하며 지역의 높은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로의 방향 전환과 함께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체 복지의 주된 복지서비스는 복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주민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주된 생활근거지로 밀착화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더 좁게는 마을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 마을단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이 거점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용시설 중 일부를 공동체 복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공동체별로 마을단위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복지제공기관을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 사업체, 일반 지역주민 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 복지의 범위를 단순한 급여의 제공이나 일부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단체, 조직을 복지의 제공주체로 활용하여 마을 전체의 복지자원의 공급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공급기반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마을별 복지자원을 복지관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을별로 공동체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셋째, 마을단위로 복지자원의 지역별 분포와 역할에 따라 광역기관, 시군구 기관 그리고 마을기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별로 복지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시키고 시군 및 광역복지기관과 함께 마을별로 공동체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기관이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1 공동체 복지의 필요성

- 국가재정의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국가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 봉착
- 국가의 제도적 지원 이외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표 1〉 지역별 복지예산 비율

구분	시도별 평균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평균	25.4	24.5	22.3	31.2	28.8	27	31.4	31.5	27.7	26.8	26	23.1	19.5	18	16	53.5	50.9	47.3
서울	31.6	29.2	27.7	31.3	32.9	27.4	-	-	-	-	-	-	-	-	-	48.9	46.0	42.2
부산	30.6	30.1	27	33.9	30.6	29.7	-	-	-	-	-	-	28.1	26.7	21.1	57.0	54.5	51.1
대구	32.6	30.5	26.7	33.2	23.7	26.7	-	-	-	-	-	-	30.2	31.4	26.4	60.8	58.8	55.3
인천	25.4	23.6	22.7	26.6	34.1	22.7	-	-	-	-	-	-	17.8	16.5	14.2	54.8	52.3	49.8
광주	35.8	32.4	29.9	36.2	34.0	30.9	-	-	-	-	-	-	-	-	-	63.0	60.5	57.7
대전	33.5	32	28.3	34.5	22.5	29.9	-	-	-	-	-	-	-	-	-	56.9	54.6	50.6
울산	23.0	21.8	19.3	24.3	17.8	20.7	-	-	-	-	-	-	25.7	26.8	26.4	46.7	43.0	38.4
세종	19.4	18.8	18.7	18.6	-	18.3	-	-	-	-	-	-	-	-	-	-	-	-
경기	23.4	24.2	21.0	-	-	-	32.3	33.6	27.6	27.1	27.4	23.8	20.8	19.2	17.2	-	-	-
강원	19.5	19.3	17.9	-	-	-	27.8	28.2	26.8	26.1	24.7	21.9	16.1	14.8	13.7	-	-	-
충북	23.0	22.5	20.7	-	-	-	33.2	33.0	29.9	27.9	28.3	26.4	19.3	18.8	17.1	-	-	-
충남	21.6	20.1	17.7	-	-	-	29.6	29.2	25.6	24.2	22.4	20.0	20.7	19.3	16.7	-	-	-
전북	25.3	24.1	22.3	-	-	-	37.2	35.0	31.9	30.1	28.2	25.8	18.0	16.2	15.0	-	-	-
전남	22.3	20.9	18.9	-	-	-	31.7	31.8	28.0	28.7	27.5	24.4	20.6	18.3	16.0	-	-	-
경북	21.4	20.1	18.6	-	-	-	31.3	30.3	28.2	24.3	22.9	20.4	17.0	16.0	14.1	-	-	-
경남	23.6	23.0	20.8	-	-	-	34.3	33.8	29.3	26.9	25.5	22.7	20.2	18.7	16.5	-	-	-
제주	19.5	20.7	19.1	-	-	-	18.9	21	19.2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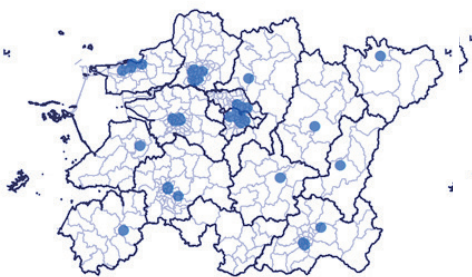
자료 : 재정고 2013~2015 재구성

-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마을단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층의 안전장치 마련
 - 공동체 복지는 지역의 높은 복지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이외에는 적절한 대안 부재
- 신뢰와 호혜 그리고 연대의 가치가 공고한 공동체를 복지와 결합시켜 복원할 경우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밀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국가의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곳곳의 사각지대도 체계적으로 해소 가능
- 공동체는 지역주민간의 상호 호혜와 신뢰라고 하는 정신적 토대 없이 물질적인 급부의 제공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 복지시설의 증가가 도민의 복지체감도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 개선 필요
 - 복지시설의 증가 혹은 복지시설의 설치가 도민 전체의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이 함께 담보 필요
- 복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증가만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지역주민이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복지 역량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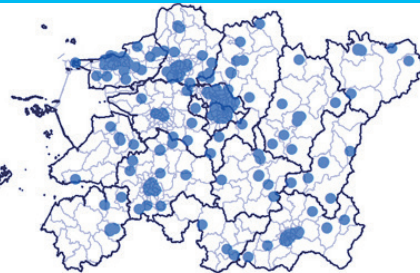
02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자원 분석

-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수요를 읍면동별로 계층별 인구와 주요 지역잠재자원으로 분석
- 전라북도 시군 전체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읍면동의 경우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복지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자원 매우 부족
- 전라북도의 지역별 복지자원 및 복지서비스 유형 분석에 따라 각 지역별 공동체 복지 거점센터 지정 적합기관 선정에 따른 공동체 복지사업 차별화 필요
- 전라북도의 지역별 복지사업의 유형별 공간분포를 보면, 사례관리는 시군별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지역주민 조직화사업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지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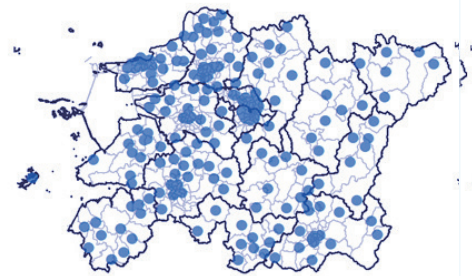
〈그림 1〉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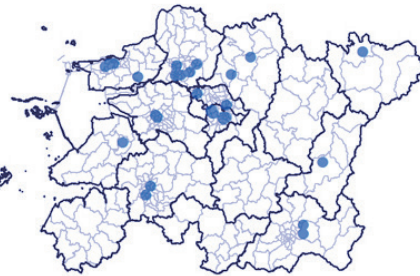
〈그림 2〉돌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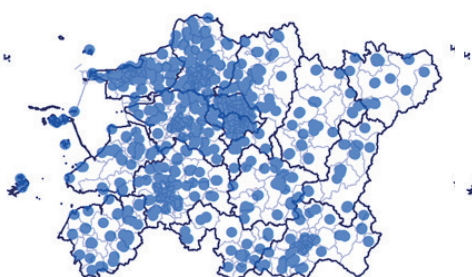
〈그림 3〉지역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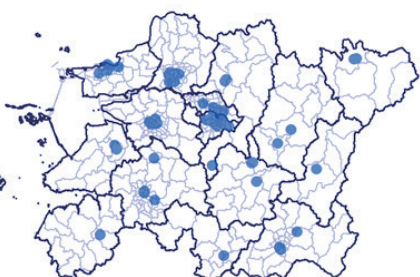
〈그림 4〉장애인자립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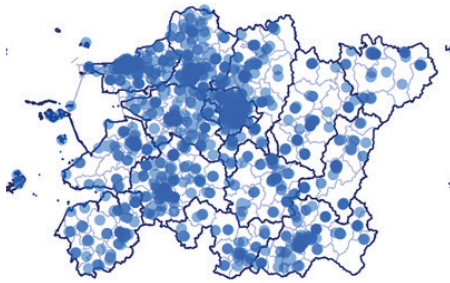
〈그림 5〉교육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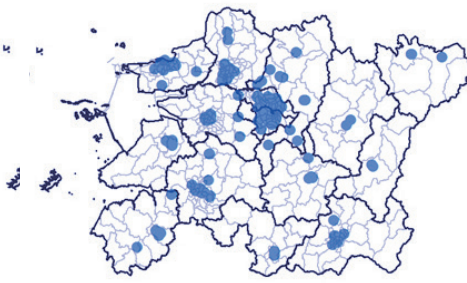
〈그림 6〉지역사회보호



〈그림 7〉전체사업



〈그림 8〉건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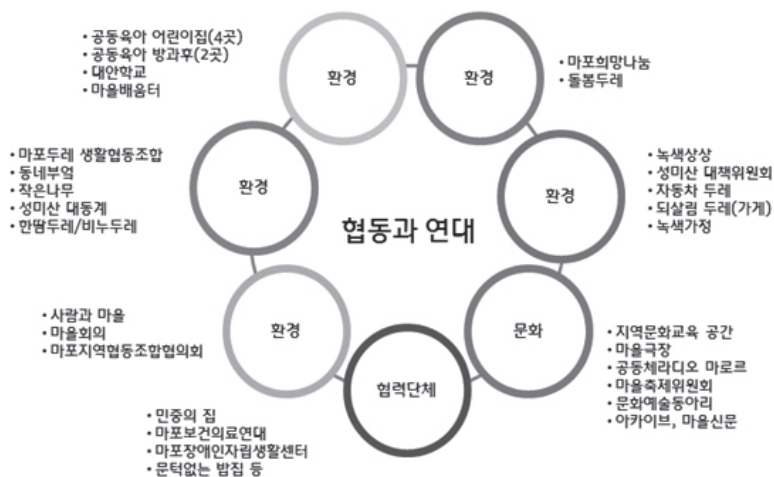


03 공동체 복지사례 분석

1) 민간주도형 공동체 복지 사례

- [성미산 마을 공동체] 보육공동체에서 출발, 성미산마을은 현재 다양한 공동체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활동들이 형성
 - 다양한 지역 사회분야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기반의 통합적 삶을 영위

〈그림 9〉성미산 공동체 연계기관 현황



- [투게더광산] 2011년 조직기반 구축 시 공동체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인
 - 투게더 광산은 공동체 복지의 사업단위를 자치구로 한정하지 않고, 자치구보다 한단계 세분화된 동단위까지 확대하여 마을을 주요 사업공간으로 설정하여 공동체 복지의 주된 사업공간으로 확장
 - 투게더 광산은 동중심 즉 마을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지역주민간의 연대의식에 기반한 복지문제 해결 시도

〈표 4〉투게더광산 사업 목표 및 수행전략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	기반구축 (조직강화/나눔병행)	마을별공동체사업 나눔문화 확산	지역공동체사업 나눔문화 생활화	자립운영준비 공동체교육센터화	자립운영 미래공동체
나눔참여	구민의 1%	구민의 3%	구민의 5%	구민의 7%	구민의 10%
하부 목표	공동체사업 초기, 교육병행	동위원회 사업활성화	도농간 교류, 연합	도농, 빈부별 공동체 활성화	광산구 공동체사업 시행
모금배분	기관단위모금	단위 통합모금병행	통합모금	통합모금	모금네트워크 완성
수행전략	· 조직배가 운동 · 동별위원회 육성 · 공동체사업 선별수행	· 동위원회간 교류 · 나눔포인트 시행 · 공동체사업 전부수행	· 일부 동자립화 · 나눔포인트 확산 · 복지모델 정형화	· 동위원회 자립활동 · 나눔포인트 정착 · 광산형 복지모델 확산	· 10%투게더광산 참여 · 공동체사업 교육운영 · 법인화, 자립운영

자료 : 광산구청 복지연계팀, 2015 ; 이종섭 외(2015) 재인용

● 투게더광산의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공동체 복지 관련 주요사업의 실무조직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운영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직은 이사회 산하 집행기관으로 운영지원, 나눔연대, 마을복지, 회원섬김, 홍보기획을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여기에 연계조직으로서 지역내 자원봉사센터와 권역활동지원센터 운영

〈표 5〉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나눔연대사업	· 마을활동가를 동기위한 뿌리깊은 사람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을 손 지원' · 명절에 사립문을 열고 접시를 나누는 '명절 이웃 살피기' · 현장과 마을공동체를 돕고 지키는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 나누는 기쁨 자라는 공동체 '지정기탁모금'
마을복지사업	· 뿌리를 튼튼하게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 마을공동체의 뿌리를 다지는 '동 복지공동체 사업'
교육홍보사업	· 민들개 흙씨처럼 나눔문화 확산 · 학습없이 진보없다 '광산복지학당' · 희망꽃이 피었습니다 '투게더 광산 나눔축제' ·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나눔 홍보와 모금'
운영지원사업	· 별이 빛나는 이유 '운영지원' · 도우면서 성장하는 '투게더 광산 서포터즈'
회원섬김사업	· 회원이 하늘이다 '회원 섬김' · 기쁨 섬김 '투게더 광산 회원의 밤' · 100인의 만민공동회 '참여공회'

●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지역의 과제 및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결정을 하는 '디딤돌운영위원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하는 '디딤돌 이웃', 동네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는 '디딤돌 살피미'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까치소리 사업,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하는 등불지기, 이웃결연사업의 희망굴렁쇠 등의 사업 추진
– 12개 동에서 1,160명의 주민들이 복지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디딤돌 운영위원회에는 153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디딤돌 이웃은 397명, 디딤돌 살피미는 610명으로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활동

〈표 6〉사상구 디딤돌 복지공동체 주요 자원조직

구분	주요사업	인원
디딤돌 운영위원회	·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	153명
디딤돌 이웃	· 도움이 필요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을 연계하고 물적 자원 지원해주는 역할 수행 · 직접적인 주민참여 봉사, 후원금을 통한 물적 지원 및 결연사업 추진	397명
디딤돌 살피미	· 지역주민 중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은 없는지를 보살피는 마을 모니터링 위원 ·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이웃 소외계층을 서로 보살피는 인적자원	610명

〈그림 10〉서울 공동체 복지 생태도



자료 : 서울시(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2) 공공주도형 공동체 복지의 사례

- [서울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운영

〈표 7〉 공동체 복지구현을 위한 사업별 내용 및 역할

사업명	자치구 추진단(자치구 마을팀)	세부내용
주민참여 지원사업	- 주민공모지원사업 주민대상 홍보 - 마을사업담당자 교육 기획, 진행 - 주민공모지원사업 중복청리 및 예산교부	- 마을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지원 - 마을사업 담당자 주민참여심사 시뮬레이션 교육 - 주민참여심사위원회 당연직 참여 - 주민기초교육 강사 파견 - 주민모임 컨설턴트 배치, 관리, 교육 - 동 네트워크 파티 대상 정보 제공 -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연계
마을기금	- 마을기금 사업설명회 - 마을기금 실행동 공모 및 선정 - 자치구 내 마을기금 관련 단체 현황에 제공	- 대상동 선정 심사위원 당연직 참여 - 마을기금 심층교육 참여 - 마을기금 관련자 기초교육, 시뮬레이션 기획, 진행 - 마을기금 기부금 단체 협의체 가구 기획 및 운영 - 동별 마을기금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마을계획	- 마을계획 실행동 공모 및 선정 - 자치구 단위의 마을계획 사업홍보 - 마을계획 민간 공동추진 협약준비 및 지원	- 대상동 선정 심사위원 당연직 참여 - 자치구 마을계획 모의수행 워크숍 기획, 진행 - 마을계획 촉진자 운영 및 지원 - 마을계획 촉진자, 마을계획단 주민리더 간담회 진행
마을활력소	- 자치구 내 동청사 담당과의 협력체계 구축 - 마을활력소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업무 추진	- 자치구 민간자원 정보제공 - 업무협의회(자치구 · 동 · 민간참여단 · 전문가 참여)

자료 : 서울시(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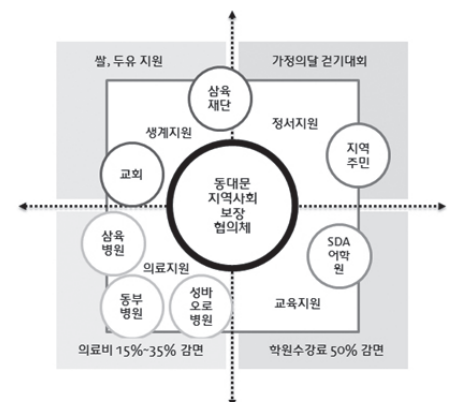
- 서울시의 공동체 복지의 민관 연계망을 보면 공동체 복지의 공간적 범주인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4대 사업(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에 따라 관련 민관의 기관이 함께 연계
 - 가령, 마을계획과 주민모임지원사업은 행정단위 중심의 지원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협력단과 마을기금은 민간의 추진단과 동단위의 복지관련 협의체로 구성

〈표 8〉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사업명	세부내용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대마련과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체계적 추진 -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정보관리, 주민교육 및 마을활동가 양성, 홍보 및 전파, 네트워크 구축
마을박람회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하고 발전 계기 마련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확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민인식과 공감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마을공동체 교육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성과체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 여성, 은퇴자 등 생애주기별 교육과 소목의 자원사업 운영

- [동대문구] 보듬누리는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 지역(洞)단위 복지문제를 지역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중복지원 예방 및 공공부문의 재정한계 극복을 위해 추진
 - 서대문구의 보듬누리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원범위는 주로 생계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이고 이들 지원의 거점기관으로 동대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심체로 활동

〈그림 11〉서울동대문구의 보듬누리 복지공동체 사업 체계도



〈표 9〉 희망의 111 결연 의료서비스 협약체결

삼육서울병원, 서울동부병원		삼육치과병원, 서울동부병원, 성바오로 병원		이용현황	
항목	감면율	항목	감면율	결연주민	결연자
종합검진	35%	레진충전	25%	207명	293명
라식, MRI	15%				
일반치료(선택치료 포함)	15%	치과스케일링	20%		
장례식장(병원직영 부분)	20%				
산후조리원	20%	기타비급여	15%		
건강보험대상 병실	우선배정				

04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 구축방안

1.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의 가치와 방향

1) 복지서비스 제공공간의 밀착화

- 공동체 복지의 주된 복지서비스는 복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주민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주된 생활근거지로 밀착화
- 공간의 밀착화를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의 전달체계의 공간구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읍면동도 다시 마을단위로 세분화
- 마을단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의 물리적 공간을 지정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이 거점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전달체계를 개선 필요

2)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원화

-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자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이 중요
- 복지의 범위를 단순한 급여의 제공이나 일부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 이를테면 식당, 학교, 병원, 봉사단체, 부녀회 등이 마을내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구조로 복지서비스를 확대
-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주민센터 등 타부처의 지역단위 사업기관들도 기존의 복지기관이나 여타 복지자원과 중복성없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관 중심의 공동체 복지 사업 조정 및 코디네이터 필요

3)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구조화

- 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원적인 복지제공의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중복성이 없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조화
- 모든 복지서비스가 마을단위의 공동체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련 기관과 광역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체계적인 연계와 지원이 필요

- 마을 및 공동체 단위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거점공간 혹은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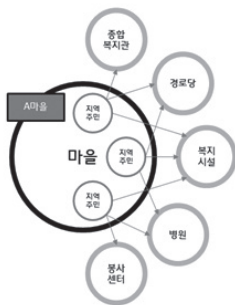
2.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 구축 방안

1) 제공방식의 밀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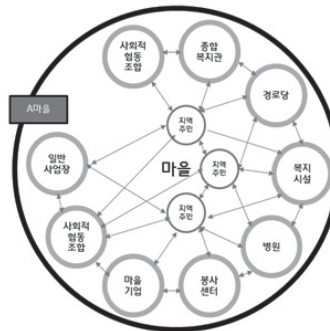
① 공동체 중심 마을복지 전달체계 개편

-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복지기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복지가 마을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전달체계 내에 공동체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과 연계기관을 중심으로 통일된 공동체 복지전달체계 구축필요
- 공동체 복지의 중장기 계획은 전라북도가 수립하되 시군에서는 이용시설 중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고, 공간적으로 다양한 복지자원과 마을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이용시설을 공동체 복지지원센터로 부설로 지정하여 공동체 단위에서 복지사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용시설 중 일부를 공동체 복지지원기관로 지정하여 공동체별로 마을단위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망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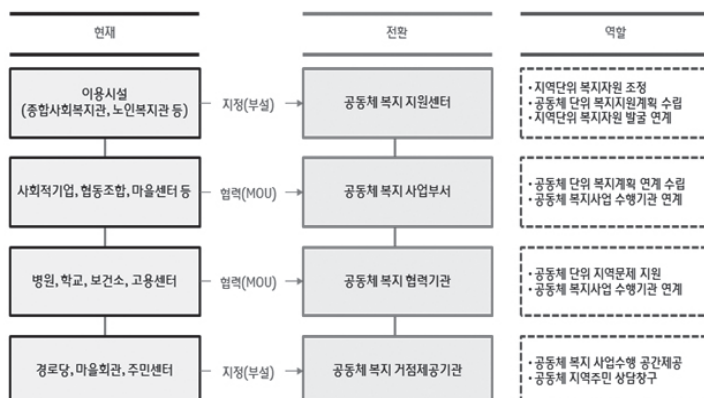
〈그림 12〉현 복지전달체계



〈그림 13〉공동체 복지 전달체계(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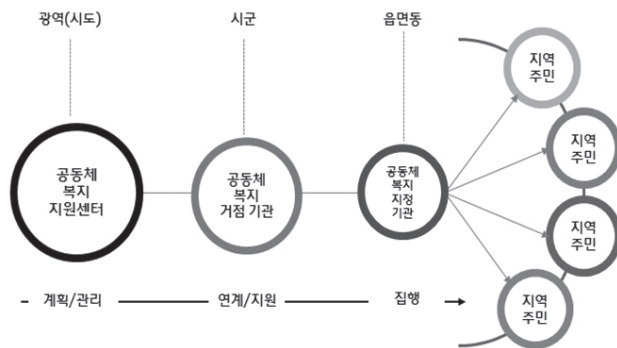
〈그림 14〉공동체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② 마을단위 공동체 복지지원 기관 설치

- 현재의 시군구에서 읍면동과 마을단위로 세분화시키고 마을단위에서 자생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읍면동의 복지기관을 공동체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복지사업이 읍면동과 마을단위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동체복지지원센터는 시군의 복지사업을 통괄하고 있는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중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관을 1개소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장기적으로는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포함)은 직접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마을 내 공동체 복지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및 조정기관으로 전환(시범사업으로 추진)

〈그림 15〉전라북도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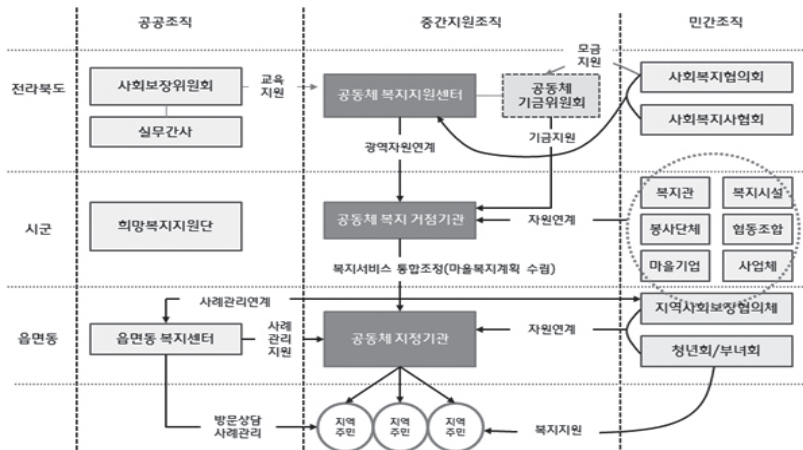
〈표 10〉 공동체 복지전달체계별 역할 및 책임수행기관

구분	역할	관련기관
공동체복지 지원계획수립	- 공동체 복지지정기관 지원계획 수립(14개 시군) - 공동체 복지지정기관 교육 및 컨설팅 - 광역복지기관간 시군 공동체 복지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성 강화교육	- 광역정신보건센터 - 광역자활센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청소년정신보건센터 -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공동체복지 거점센터	- 공동체별 지원계획 수립(공동체 단위) - 지역 내 유관기관 복지사업조정 - 공동체별 방문복지사업 수행	-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체복지 지정기관	- 공동체 복지수행 공간제공 - 공동체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 경로당(농촌) - 마을회관(농촌) - 주민센터(도시/농촌)

③ 마을단위 공동체 복지제공 거점기관 지정제 운영(지정기준 설정)

- 마을단위로 공동체 복지를 추진하기 적합한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한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복지 거점기관 지정
 - 마을내의 다양한 기관이 복지생태로 엮여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동체 복지 지정기관은 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상시 가동되는 program 수행기관 그리고 병원, 학교, 보건소 등 지역주민의 중요 욕구를 해소하는데 복지서비스를 연계 기관 그리고 협력기관으로 부녀회나 마을봉사단, 청년회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기관 중 공동체 복지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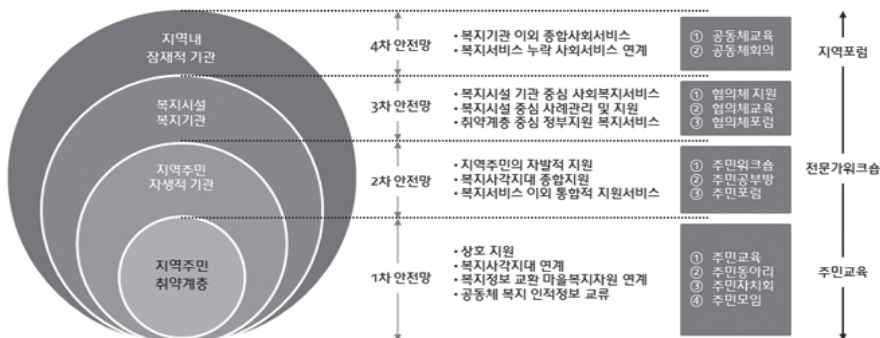
〈그림 18〉공동체 복지 수행기관별 체계(안)



② 공동체별 단계적 마을 안전망 구축: 공동체 복지 포럼 운영

- 공동체복지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자와 공급자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 이 같은 과정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공동체 복지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 지역전문가 대상 포럼과 워크숍이 주기적 진행
 - 1차 안전망은 기존의 복지제공기관에서 지역주민 자율적 관계망을 통해서 상호 보호와 지원
 - 2차 안전망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자생적 기관이 지역주민을 상시적으로 보살필수 있는 지역안전망
 - 3차 안전망은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체들도 지역기관들은 상시적인 안전망이라기보다는 비상시적인 지역주민 지원조직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제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계별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과 포럼 워크숍 등은 공동체 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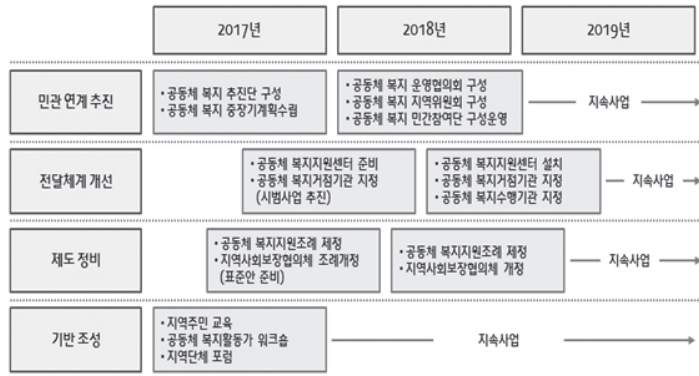
〈그림 19〉단계별 마을안전망 구축 방안



③ 공동체 복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공동체 복지는 단시일에 구축할 수 없는 다수 지역주민의 노력과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입법기관의 제도적 보완 등이 동시추진
- 공동체 복지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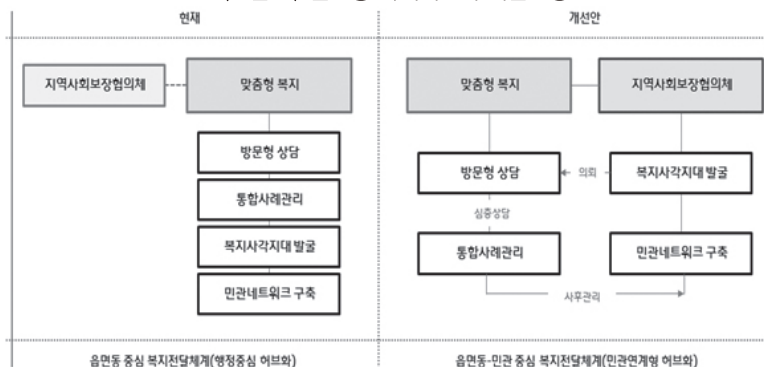
〈그림 20〉 공동체 복지 단계별 추진전략



④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역할조정

- 동복지허브화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공동체 복지라고 하는 이념적 가치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상근간사)의 배치와 함께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성 강화는 시군과 전라북도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담보되어야 함
- 맞춤형 복지팀의 경우 팀장1명 팀원 2명 등 총 3명의 인력으로는 방문형 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네트워크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방문형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복지허브화 사업의 중요한 민간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업무 분담→전라북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맞춤형 컨설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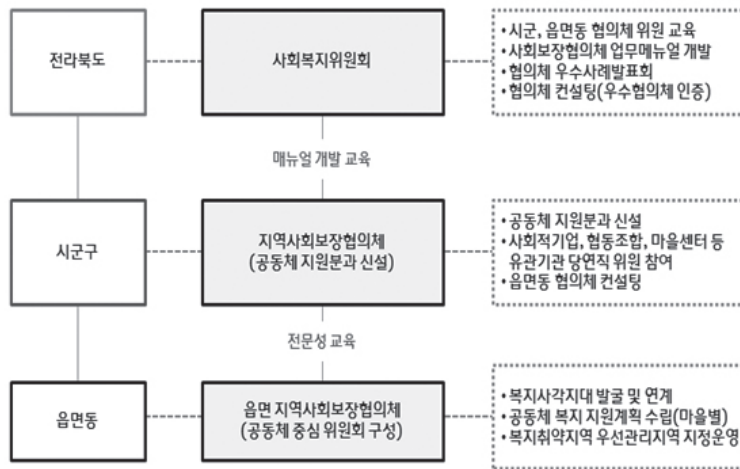
〈그림 21〉 읍면동 복지허브화 역할조정



3) 제공기관의 다원화

- ①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제도적 연계와 역할정립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제도적 연계와 역할정립
- 공동체 복지 수행의 중요한 민간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과 읍면동별로 개별조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련사업의 단절 해소 필요
 - 시군구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설에 발맞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라북도가 공동체를 가치로 복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그림 22〉 공동체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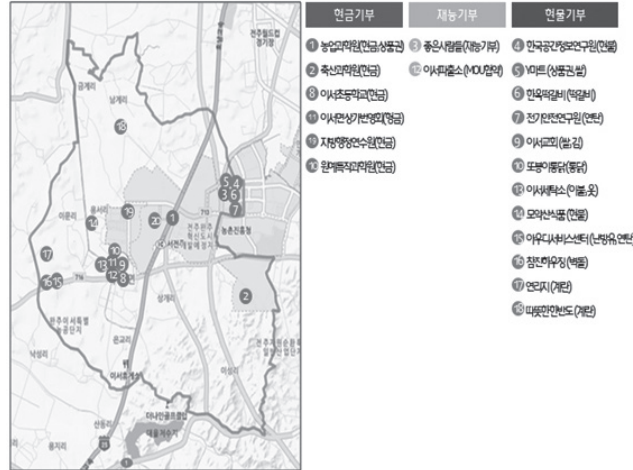


- 읍면동의 경우 지역자원이 충분치 않아 읍면동 자원만으로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례관리가 어려운 읍면동을 선별하여 보다 전문적 사례관리지원
 - 읍면동 중 특별히 지역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읍면의 지역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이 취약한 지역 등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전문적인 컨설팅

② 마을별 공동체 복지 지도 제작(체계적인 자원연계망 구축)

- 공동체 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복지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복지자원으로 가용가능한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복지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공동체 복지의 지도제작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가능, 어떤 곳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잠재적인 복지자원은 인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중복을 최소화

〈그림 24〉 공동체 복지 지원망



- 기금의 조성은 읍면동별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군별로 혹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성하여 기금활용이 필요한 마을공동체에 적절하게 지원
- 광역단위에 설치하게 되는 공동체 복지지원센터 내에 공동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마을별로 기금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 기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에 공동체 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graph TD; A[기부 및 기여] --> B[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지원 센터]; C[① 전라북도 기부단체 인증  
② 기부단체 가맹사업장등록  
③ 기부단체 지역주민홍보] --> B; D[기금배분 신청] --> B; B --> E[공동체 복지자금 조성(모금)  
공동체 복지자금 홍보  
공동체 복지자금 운용(배분)  
공동체 복지자금 관리]; B --> F[공동체 복지자금 지원]; F --> G[단체]; F --> H[개인]; F --> I[마을 공동체];
```

- 공동체 복지의 기금은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지원센터의 중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기부한 단체에게 기부단체 인증 및 기부단체 가맹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업무 등을 수행
- 공동체 복지기금은 기금의 적립과 합리적 운용을 위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과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
- 공동체 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공동체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 필요